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 방향

요 약

지난 20년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구와 일자리, 기업, 지역내총생산, 소비, 자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도권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을 추월하였다. 이는 과거 수도권 및 지역 대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을 통한 낙수효과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총생산 규모와 소득, 생산성의 지역 간 차이가 인구이동을 발생시키고, 다시 지역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균형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균형발전지표의 격차와 인구 유출입 간의 관계가 이를 나타낸다. 균형발전지표 상위 57개 지역은 20여 년 전보다 인구가 더욱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5%가 상위 기초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으며, 하위 58개 지역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상위 지역의 대부분은 수도권, 하위 지역의 대부분은 비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산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핵심 분야와 핵심 공간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자생적이고 차별적인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제도지원, 균형발전 수준에 따른 차등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머리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통해 빠른 소득 증가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후장대형 중심의 산업구조는 지역 간 개발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농산어촌 지역은 개발시대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낙후지역에서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 인구 유출이 확대되면서 지역 기반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참여정부부터 지금까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기회 균등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제정(2004년)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균특법을 근거로 4차에 걸친 국가(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은 17개 시도가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문화, 보건·복지, 과학기술, 교육, 농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각종 균형발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향하는 지역 간(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 격차 완화라는 정책목표에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경제의 주요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의 총인구와 GRDP 규모는 비수도권을 추월하였다. 이는 최근 조선 및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비수도권의 지역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는 광역시 및 지방 대도시의 구(區) 지역까지 포함되는 등 지역 거점도시로서의 위상과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간의 우리나라 균형발전정책이 지역의 핵심도시 또는 거점도시 중심의 산업발전을 통해 낙후지역, 농촌지역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수도권 및 대도시 집적효과, 불균형 성장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최근까지 지속된 비수도권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생산성 저하는 지역 간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고는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핵심지표를 통해 확인한다. 그리고 지역의 생산성과 인구 규모를 통해 발전 격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 여부를 살펴본 다음, 균형발전지표상으로 본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고착화·양극화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정책공간과 정책효과의 일면을 살펴보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생각해본다.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 진단

(1) 주요 지표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정도를 보면,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경제·사회 관련 분야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50.3%, 청년층의 55.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자의 50.5%(2021년 기준), 사업체 수의 47.0%(2019년 기준)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분포의 경우 86.9%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의 생산 규모를 나타내는 GRDP(지역내총생산)도 수도권이 5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 규모의 차이는 경제력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표 1〉 주요 지표별 수도권 및 비수도권 비중 차이

항목	수도권	비수도권	항목	수도권	비수도권
면적(2021년)	12.1%	87.9%	1,000대 기업 수(2020년)	86.9%	13.1%
인구(2021년)	50.3%	49.7%	GRDP(2020년)	52.5%	47.5%
청년(20~39세)인구(2021년)	55.0%	45.0%	1인당 GRDP(2020년)	37.1백만원	34.1백만원
취업자 수(2021년)	50.5%	49.5%	신용카드 개인 사용액 (2021년)	75.6%	24.4%
사업체 수(2019년)	47.0%	53.0%	주택매매가격(중위단위값) (2022년 6월)	6,460천원	2,142천원

자료: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부동산원.

1인당 GRDP는 수도권이 3,710만 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00만 원이나 높다.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신용카드 개인 사용액은 수도권이 7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단위면적당 주택매매가격은 비수도권의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지역인구와 지역생산성 간 관계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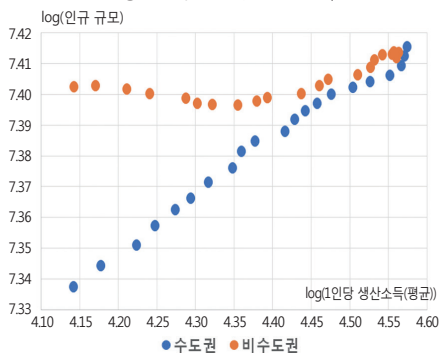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00년도만 해도 53.7%로 수도권보다 7.4%포인트의 우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해마다 격차는 감소했고, 2019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이 역전하여 50.1%를 기록하였다. GRDP 비중은 비수도권이 2000년 초 52.3%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역전되어 수도권이 50.1%를 차지하였다. 이후 수도권의 GRDP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20년 기준 52.5%를 기록하고 있다.

규모로 본 수도권·비수도권 발전 격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 <그림 1>의 수도권·비수도권 생산소득 수준과 인구 규모를 보면, 수도권의 1인당 생산소득 수준의 증가는 인구 규모와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인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생산성의 증가는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는 지역 내 생산성 제고가 취업자나 사업체 수, 기업 수의 증가로 이어진 데 기인한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 생산성과 인구 간의 관계가 모호하다. 특히, 소득이 비교적 낮은 단계에서의 소득 증가는 인구 규모의 증가와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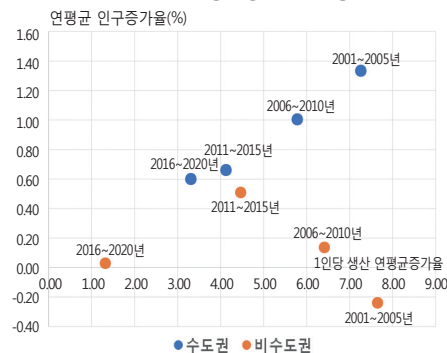
<그림 1>의 수도권·비수도권 생산성 및 인구 증가율에서는 비수도권의 생산성과 인구 간의 불명료한 관계가 더욱 확연해 보인다. 수도권의 생산성 증가는 인구 증가

〈그림 1〉 지역경제 간 소득 격차에 따른 인구

수도권·비수도권 생산소득 수준과 인구 규모(2000~2020년)



수도권·비수도권 생산성 및 인구 증가율



율의 증가와 비례 관계를 형성하지만, 비수도권에서의 생산성 증가는 오히려 인구 감소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는 비수도권에서의 생산성 증가가 경제 규모와 관련이 있는 사업체 수, 기업 수,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생산성의 증가는 이들 변수들과 관련이 크고 결국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생산성과 인구 간의 양의 관계, 높은 생산성 수준에서 보여주는 비수도권 생산성과 인구 간의 양의 관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생산성 제고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이 오히려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구조가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의 생산성 제고 전략은 청년이나 기업, 경제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균형발전지표로 살펴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1) 균형발전 핵심지표에 의한 경제 상황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구조적인 생산성 격차는 다양한 삶의 균형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균형발전 지표에서의 격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균형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는 2개의 핵심지표(인구·재정)와 8개 부문의 객관지표(주거·교통·산업·일자리·교육·문화·여가·안전·환경·보건·복지), 주관지표(10개 부문 22개) 등 총 65개로 구성된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중 인구증감률(40년 연평균)과 재정자립도(3개년 평균)로 구성된 핵심지표는 17개 시도와 229개(세종시 포함) 시군구별로 상·중·하위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중앙부처의 다양한 사업 추진에 활용되고 있다.

먼저, 균형발전 핵심지표인 인구와 재정으로만 본 시도별 상위(25%) 지역은 수도권과 세종시가 차지하였다. 과거와 비교할 때 수도권 3개 시도의 순위 변동은 있었으나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출발한 이후 인구증가

〈표 2〉 정부별 균형발전 핵심지표에 따른 시도별 순위 변화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서울	1	7.43	4	7.20	4	7.14	4	6.79
부산	7	6.46	7	5.88	9	5.34	9	4.78
대구	6	6.46	6	5.98	8	5.43	8	5.25
인천	2	7.10	3	7.33	3	7.33	3	6.97
광주	8	6.07	8	5.83	6	5.59	7	5.46
대전	5	6.88	5	6.75	5	6.31	6	5.68
울산	3	7.09	2	7.38	2	7.65	5	6.48
세종	-	-	-	-	7	5.57	1	8.10
경기	4	7.04	1	7.48	1	8.08	2	8.09
강원	12	3.13	13	3.20	15	2.89	15	2.83
충북	11	3.51	11	3.82	12	3.73	12	3.96
충남	13	2.94	12	3.46	13	3.73	13	3.85
전북	14	2.90	14	2.87	16	2.67	16	2.61
전남	16	2.12	16	2.01	17	2.01	17	2.24
경북	15	2.80	15	2.76	14	2.93	14	2.99
경남	10	3.75	9	4.07	10	4.37	11	4.35
제주	9	4.35	10	3.98	11	4.23	10	4.59

자료: 저자 작성.

주: 1)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예산 기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결산 기준임.

2) 인구증감률은 각 정부별 중반 시점을 기준으로 40년 평균증가율 기준, 재정자립도는 각 정부별 초기 3년 평균 재정자립도 기준임.

율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순위가 급등한 반면, 울산광역시와 조선업 및 자동차부품 산업의 위기에 따른 재정자립도 악화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하위(25%) 지역은 강원·전북·전남·경북 등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인구증감률과 재정자립도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때 강원도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하락한 것 이외 다른 지역은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는 양상을 보인다. 중위권은 광역시와 충청권, 경남, 제주 등이 차지하였으며, 소폭의 순위 변동은 있었으나,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즉, 시도 간 균형발전 수준은 수도권과 광역시가 상위, 도 지역 등이 하위로 양극화 및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별 지수값을 보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의 균형발전 핵심지표 역시 도 지역과의 격차가 크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광역시의 발전 수준이나 경제 규모를 통해 해결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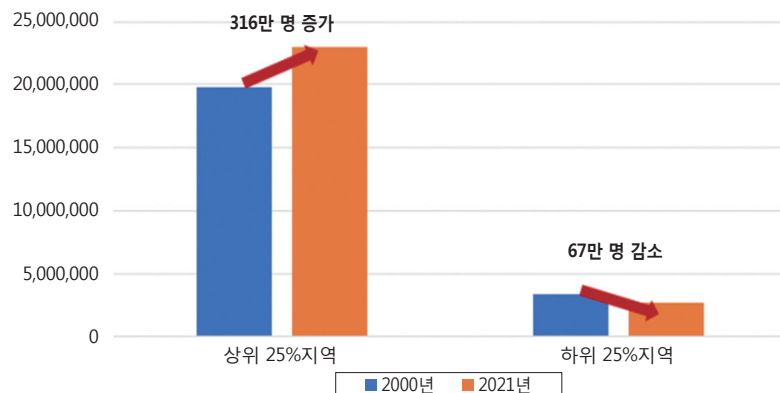
(2) 균형발전지표로 살펴본 삶의 균형 수준

또한 균형발전 핵심지표를 기준으로 기초지자체 229개를 상·하위 지역으로 구분한 결과, 총인구수 기준, 상위 지역(25%)은 2000년 1,982만 명에서 2021년 2,298만 명으로 316만 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반면 하위 지역(25%)은 335만 명에서 268만 명으로 67만 명 감소하였다. 즉 균형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들은 20년이 지난 현재 인구가 더욱 증가하였으나, 균형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은 더욱 감소하여 상·하위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양극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하위 지역은 총 58개 시군구 중 비수도권이 53개를 차지하며, 상위 지역 57개 중에서는 수도권이 37개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인구 증가와 비수도권 인구 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핵심지표 이외 객관지표 8개 부문별로 상·하위 10%(각 23개) 지역 중 비수도권 시군구가 차지하는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 등 4개 부문은 상위 지역의 절반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며, 교통, 교육 등 2개 부문은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지역 분포는 환경을 제외하고는 7개 부문에서 비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환경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비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 지역 기초생활권 중심으로 지역 삶의 균형 정도가 낮은 상황이며, 이는 지역의 성장동력 약화, 인구의 추가 유출 등과 같은

〈그림 2〉 균형발전지표 상·하위 25% 지역의 총인구 변화(2000년 vs. 2021년)



자료: 저자 작성.

주: 229개 시군구 기준 상위 57개 지역 및 하위 58개 지역 총인구수의 합산.

〈표 3〉 균형발전지표 부문별 상·하위(각 10%) 지역 중 비수도권 지역 수 분포

단위: 개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
상위 지역(23개) 중 비수도권 지역 수	2	11	7	11	14	14	22	17
하위 지역(23개) 중 비수도권 지역 수	21	20	15	21	22	21	10	22

자료: 저자 작성.

지역발전 기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하위 지역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지역 전반의 삶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균형발전지표 하위 지역(57개) 중 비수도권 53개 지역의 재정자립도(2017~2019년 평균)는 평균 20.1%로 삶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재정 여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광역시도의 경우도 하위 4개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4%에 불과하여 지역생활권에서의 삶의 불균형을 교정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상황이다. 반면, 수도권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73.4%로 지역 자체적으로 삶의 불균형에 대한 개선 여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광역시나 수도권 중심의 기존 경제발전 구조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수도권 하위 지역을 중심으로 삶의 불균형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 투입 방안을 모색하고, 부문별로도 고른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생활권 단위에서도 삶의 불균형을 회복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4.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1) 기존 지역정책의 한계

지역경제의 생산성 확보를 위한 장소 기반 정책들은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정책 공간분포는 특정 공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의 국가균형발전사업과 낙후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특구는 일부 대도시 및 50만 이상 도시 위주로 분포되어 있고 특구, 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지역들은 낙후지역(인구감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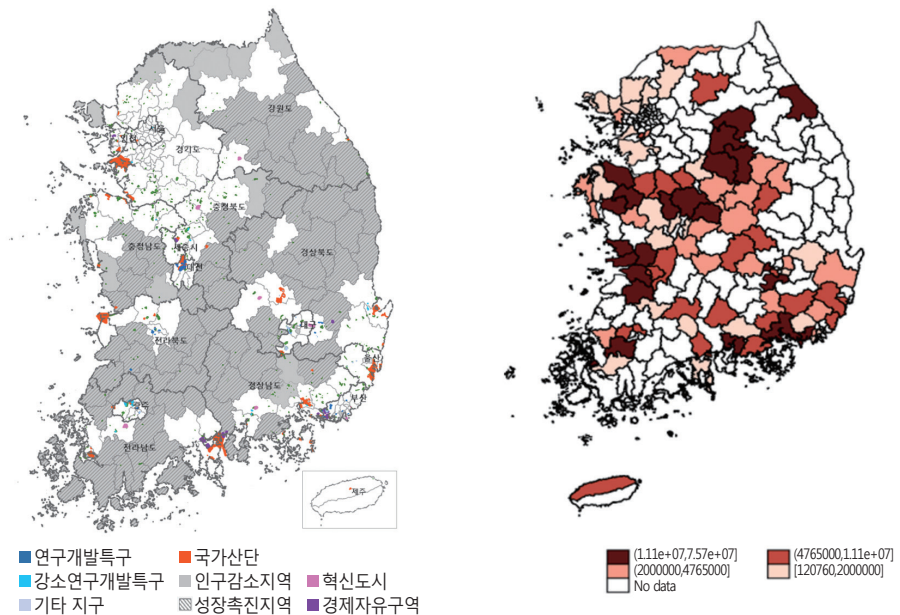
역, 성장촉진지역)으로 대부분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균형발전 전체 성과에 드러나듯이 기존의 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내 생활권역들의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공간 활용 계획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약 65%가 넘는 지자체가 1개 이상의 지역특구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 특화자원의 활용도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지정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인구감소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균형발전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수동적 형태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비수도권 발전 격차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 지원 정책도 의도치 않게 수도권 편향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예를 들어 보면 지역투자보조지원 실적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쏠림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가 형성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그림 4〉 참조).

이처럼 기존 지역 공간정책들은 사전 단계 또는 사후 단계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를 축소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지역 공간정책이 발전 격차 확대

〈그림 3〉 특구 및 산업단지와 낙후지역의 분포 〈그림 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누적 실적 분포 (2016~2019)



자료: 산업연구원(2022),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자료: 산업연구원(202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효과분석 및 사업운영 방향 제언.

메커니즘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수도권 및 지역 대도시 중심의 발전구조를 활용하는 정책을 확대 추진하더라도 해당 공간을 중심으로 한 낙수효과의 실효성 확보를 장담하기 어렵다.

(2)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의 방향

주요 지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수준과 균형발전지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하위 지역의 분포 및 분야별 삶의 균형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자면, 2010년대 들어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인구·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지역 간 발전 격차는 생산성의 지역별 차이가 인구 유출입에 영향을 주고,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인구 규모의 차이는 다시 지역의 경제적 생산 수준과 다양한 분야의 발전 수준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한다. 지역발전 격차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삶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삶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역경제성장률(1인당)이 낮아지고 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경제 집중은 장래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령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취업률 하락 등을 초래한다. 이로 인한 가계의 유동성 자산 감소는 소비나 투자, 출산을 하라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정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기존의 장소 기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대응지역, 여러 특구지역 제도 등의 장소 기반 정책이 있으나, 지원정책과 수단이 지역투자 확대에 이르지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기업 및 산업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이 입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 감면 정책과 규제혁신제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지정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특화 산업육성에 정책 초점을 두어야 한다. 현 주력산업에 의해 형성된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기존 주력산업과 수도권 의존적인 산업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생적이고

차별적인 산업에 정책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접지역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과 주변 중소도시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조의 협력체제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균형발전 수준과 지표를 보다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한 차등 지원을 통해 지역의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사업 목적과 특성에 따라 저마다의 지표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균형발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균형발전지표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업의 경우, 사업기획의 우수성과 기대효과 이외에도 지역발전 수준에 따라 사업 참여의 기회 확대 및 보조율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김현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 전문연구원
hwkim@kiet.re.kr / 044-287-3285
「지역혁신성장계획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향」(공저, 2022)
「지역혁신인프라 구조 분석 및 효율화 방안」(공저, 2018)



이준영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 부연구위원
juneyounglee9@kiet.re.kr / 044-287-3058
「ICT 분야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 분석」(공저, 2020)